

지급준비율 인상, 미풍에 그칠 것인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월19일 지급준비율을 0.5%p 추가 인상했다.

2010년 들어 5번째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4%로 2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대응한 조치이다.

미국이 600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달러화를 공급하는 2차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해외 부동산 자금 유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급준비율 인상에 그쳤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국과 해외의 금리 차이가 확대돼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풀린 6000억달러가 중국으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일단 소비자물가를 잡는데 그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소비가격 안정과 국민기본생활 보장 차원에서 16개 조치를 마련하고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정적 공급, 유통원가 인하, 농산물 유통질서와 건전가격 감시체제 확립, 매점매석 차단을 위한 생활필수품 시장 감시 강화, 화학비료 생산과 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한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가 화학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부에서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기투기자본 유입을 가속시킬 수 있어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을 냉각시키는 조치를 취한 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석유화학을 비롯한 화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적으로, 미국이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87-88달러 수준을 오르내렸으나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자 81-83달러 수준으로 하락했고, 아일랜드에 대한 1500억유로 지원이 현실화되면 80달러 붕괴 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과일 냉각조치에 이어 유럽의 경제위기가 겹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은 중동의 수출 본격화와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겹쳐 수익성이 악화되는 와중이어서 중국의 냉각조치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학저널 2010/11/29〉